

'12·3 내란의 밤 전북도청 폐쇄' 진실공방

이원택 "사실상 방조 행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 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김관영 도지사의 12·3 내란 당시 대응을 두고 "문서기록은 분명히 순응을 가리키는데 해명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다"며 정면 공세를 나섰다.

이 의원은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대응은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에서 벌어진 있을 수 없는 내란 방조 행위"라며 "이제라도 진정한 성찰과 사죄로 내란의 밤을 둘러싼 진실을 스스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이 의원에 따르면 우선 전북도가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긴급 대처상황 문건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해당 문건에는 '35시간과 협조체계 유지, 유관기관 동향 파악'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지역계엄상황실을 설치한 군과 협조체계를 유지했다는 것은 위헌·위법 논란이 제기된 계엄에 순응한 정황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방부 헌법준중 정부혁신 TF 활동결과"에서 35시간이 경과조차 절차 대상이 된 점을 언급하며 "전북자치도의 대응은 더욱 엄중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4일 한국방송공사(KBS)보도 화면에 등장한 전북자치도 문건에 2025년 예산안 의회 미의결 대비 준 예산 편성 준비 라는 문구가 표기돼 있는 것을 짚어 보였다.

준예산은 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의원은 "이는 계엄포고령 제호에 따른 지방의회 기능 마비를 사실상 전제해 행정 준비"라며 "계엄에 맞닥뜨리는 해명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청사 출입통제 조치의 문제점을 들어 김 지사는 이를 "평상시 방호조치"고 설명했지만 이 의원은 국정감사 제출 문서와 내부 상황 기록, 언론 브리핑 발언 등을 근거로 "도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당시 전북도청 출입 통제와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에 "진실 스스로 밝혀야" 공세 "당시 군부대와 협조 체계 유지, 위헌·위법"

작성한 일체의 문서기록은 청사폐쇄 조치가 실제했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는 도청사 출입 통제에 그치지 않고 계엄사의 지시를 받은 행안부의 위법한 지시를 도내 시·군에 그대로 해 내려보냄으로써 윤석열이 불법으로 저지른 12·3 내란을 사실상 방조한 꼴이었다"고 질타했다.

뒤이어 이 의원은 "행안부의 청사 출입통제 지시 및 전파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북도는 '매뉴얼에 따른 단순 전파'가 아니라 거부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당시 행정안전부의 청사 출입통제 지시에 대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의 조치와도 대비된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2025년 하반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해 도지사 보고체계를 변경한 것도 문제 삼았다.

개정 전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당직근무자가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하

도록 돼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부서장을 경유하도록 바뀌어 있어 "김 지사가) 보고받지 못했다는 해명을 사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덧붙여 도청 최고 책임자인 김관영 지사가 계엄 상황 하에서 보고받지 못했다는 해명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하면서 2025년 10월 개정 이전의 전북자치도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보면 비상사태 발생 시 당직근무자는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돼 있다.

특히 당시 시간대별 조치사항을 보면 오후 11시 20분 행안부 지시 접수, 오후 11시 30분 행정부지사 주재 회의, 오후 11시 43분 시·군 전파, 0시 도지사 주재 회의가 이어졌다.

이원택 의원은 "각종 기록과 문서에서 보여주는 객관적인 사실들은 전북도의 12·3 윤석열 내란 방조"며 "도민들은 이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도지사의 태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도 "도청 폐쇄 없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이철규 대변인이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원택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반박하고 있다.

"청사 방호조치, 규정 따라야간에 우체국 후문만 운영 당시 비상 국면으로 판단... 내란 동조 해석은 왜곡"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12·3 내란의 밤' 전북도청 청사 폐쇄 및 내란 방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전북도청은 폐쇄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이는 4일 오전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군부대 협조 및 준예산 준비 의혹과 관련한 반박 입장이다.

이날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당시 도민안전실장이던 운동욱 현 전주시 부시장 총무과장이던 유호연 현 정읍시 부시장 당시 대변인이던 김철태 현 정화기획관, 대변인이 이철규, 당시 전북도청 당직사령 정재훈 씨 등이 참석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김 지사의 입장문은 이철규 대변인이 대독했다.

도는 2024년 12월 3일 밤 도청이 폐쇄됐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당시 청사 내부에서는 군부대의가 진행 중이었고, 120여명의 공무원이 출입했으며, 기자들도 자유롭게 취

재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직원 출입기록이 남아 있고,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의 증언도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또 청사 방호조치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야간(오후 7시~오전 7시)에는 우체국을 통해 제기한 군부대 협조 및 준예산 준비 의혹과 관련한 반박 입장이다.

해당 조치는 2024년 12월 3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됐으며, 추가적인 폐쇄 조치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국정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기계적 표현에 따른 보고 착오"라고 해명했다.

조치했다는 표현이 일상적 방호 조치를 의미한 것일 뿐, 별도의 폐쇄 조치를 뜻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국회 제출 자료에도 도지사가 별도의 폐쇄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14개 시·군에 청사 폐쇄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도는 당직사령이 '전북특별자치도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시사항을 우선으로 전파하는 공문은 발송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시·군들 역시 청사를 폐쇄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근무 발령과 관련해서는 규정상 비상사태 발생이 임박해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당시 상황을 엄중한 비상 국면으로 판단해 비상근무를 발령한 것이며, 이를 두고 내란 동조로 해석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언론 인터뷰에서 계엄을 '납득·응답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같은 날 지정 무렵 군부대의에서도 계엄 해제와 민주헌정 질서 수호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계엄 해제 및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하는 등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청사를 애초에 폐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쇄 해제 지시 역시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전파 시간'은 행정 절차상 상황 종료를 알린 시점일 뿐, 폐쇄 철회를 늦춘 정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전북도청이 폐쇄되지 않았다는 것은 출입기록과 현장 증언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적 진실"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제기되는 정략적 의혹 제기는 도민과 공직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향후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중요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도는 관련 자료와 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는 질문에 대해 이철규 대변인은 분명한 입장 표명을 통해 법적 책임이 수반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501건 최종 가결

478건 재신청 포함 신규 신청·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 제기 요건 충족 여부 추가 확인

전북 출신인 김은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국토부가 2월 한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에 걸쳐 1,168건을 심의하고 총 501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



로 보증을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됐다.

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을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만6,95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9,655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전세

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6,475호로 20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714호를 매입전체 매입실적의 88%에 해당했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지리산 중심의 새 시대 열겠다"

이정린 전 도의원
남원시장 '출사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직을 내려놓고 남원시장 선거에 뛰어난 이정린 예비후보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달 29일 도의원을 사퇴하고 27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이날 남원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행보에 돌입했다.

이 예비후보는 "남원을 전북 동부권의 중심도시로 키워 지리산 중심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남원에서 태어나 한 번도 남원을 떠난 적 없는 남원 사람으로서 오직 남원민을 위해 이 길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행정·시민참여, 경제·산업, 농업·농촌, 복지·의료, 교육·체육, 문화·관광, 건설·교통 등 6대 분야 35개 공약을 준비했다고 밝



혔다. 다만 "완성본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다듬어갈 첫 번째 설계도"라며, 이날은 남원 변화의 방향을 보여줄 5대 핵심 공약을 우선 공개했다.

이날 이 예비후보가 내놓은 공약으로 공공의대·KAIST AI 공공의료 연계 클러스터 구축, 시민참여 확대 통한 '신뢰행정' 전환, 남원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 지리산연계 '회복체류도시' 조성, 농업 핵심산업 전환 등 6대 분야 35개 공약을 준비했다고 밝

"새만금 대혁신 이끌 구원투수 필요"

도내 시민단체, 혁신당 조국 대표 군산 출마 공개요청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22대 국회의원 군산·김제·부안갑 재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지역 인사들의 공개 요청이 나왔다.

"조국 대표 군산 출마 요청 추진위원회(공동회장 박맹수·최연성)는 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새만금 대혁신을 이끌 구원투수로 조국 대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추진위원회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박맹수 공동 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최연성 공동 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추진위는 성명을 통해 "군산은 지금 흥망의 기로에 서 있다"며 "한때 서해안 산업 중심지로 빛났던 도사가 오랜 세력 독식과 구태 정치의 굴레 속에서



참제를 거듭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정치권의 고질적인 부패와 무능이 군산의 미래를 좁막았고 시민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군산 정치는 이미 자정의 한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능력과 혁신은 뒷전이고 연고와 당파에 의존해온 정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시민들은 똑똑히 보았다"며 정치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진위는 "지역 연고"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군산 출신이 아니게 왜 출마해야 하는지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과거 타 지역 출마 사례를 들며 "능력과 비전을 갖춘 인물이 지역을 혁신한다면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 물은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부패와 무능, 인질의 카르텔을 깨고 시민 중심 정치를 실현할 새로운 정치 리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조 대표에 대해 "검찰개혁을 외치며 기득권의 공격에 저항했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정치인"이라며 "거센 정치 공세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신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꽤 거리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시민 편에 설 수 있는 인물"이라며 "중앙정부를 향해 군산의 목소리를 당당히 낼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최근 거론된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새만금과 군산에 더없이 큰 기회가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만금과 군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조 대표가 그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선거와 관련해 조 대표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추진위 측은 도당에는 이러한 기자회견 사실에 대해 알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변호사 2명 위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4일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입법고문에 이한선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황선철 변호사를 각각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이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법령·자치법규의 쟁점 해석에 대한 자문, 의정활동과 의사운영 등 현안문제에 관한 자문, 도의회

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및 지원에 대한 자문 등이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이번에 위촉된 입법·법률고문 두 분은 오랜 법조 경험자로서 여러 소송에서 좋은 성과를 낸 법률 전문가이기에 앞으로 도의회의 입법 현안에 더 나은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